



26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7광주세계여성포럼 환영리셉션에서 캐나다 여성인권운동가 나오미 골든버그의 인사말이 끝나자 박광태 공동위원장과 이희호 명예위원장, 김필식 공동위원장(앞쪽 왼쪽부터)이 박수를 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세계 여성 평화네트워크 모색

광주 '세계여성평화포럼' 개막...세계적 인권운동가 등 대거 참여

'여성의 문화와 인권'을 주제로 열리는 2007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이 26일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다. <관련기사 5면>
 이날 열린 리셉션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명예위원장과

박광태(광주시장)·김필식(동신대 이사장) 공동위원장을 비롯, 세계적인 인권운동가인 파키스탄의 무크타르 마이 등 200여명의 국내외 여성운동가·학자들이 참여했다.
 또 인권평화 퍼포먼스, 빅마마 등 대중가수들의 공연으로 진행된 전야

제 행사에는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여, 성황을 이뤘다.
 27일에는 전 참가자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개회식에서는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과 도이 다카코 전 일본 사민당 대표의 축사, 이희호 명예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진

다.
 본 행사인 학술대회에서는 24명의 국내외 패널들이 '다문화주의와 여성'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며 28일에는 '세계여성평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광주 평화선언'을 발표한다.
 이밖에 세계여성인권·평화 구호기금 마련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한편 박광태 광주시장과 김필식 위원장, 김혜자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날 민주노총이 세계여성포럼 행사장에서 시위를 벌인 데 대해 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4기 민선자치 1년 1 자치 성적표 여전히 빈약

오는 7월 1일은 민선 4기 출범 1년을 맞는 날이다. 그러나 자치역량 부족과 경제적 빈곤, 잇따른 단체장 비리, 서울 중심의 제도, 지방의회 활동 미진으로 광주·전남지역 민선4기 1년의 성적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일부 시·군·구는 기초단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시책을 통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민선4기 1년의 현주소와 올바른 방향을 살펴본다.

모든 결정 단체장에 의존

끊이지 않는 비리

단체장의 위법과 비리는 곧바로 리더십 누수로 이어진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와 민선 4기 출범 이후 전남지역에서 선거법위반이나 비리, 직무상 문제로 사법처리된 단체장은 모두 10명(1명은 배우자). <표>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단체장들이 직을 잃거나 재판을 받는 바람에 행정차질과 막대한 예산 낭비를 불러왔다.

지난해 10월 25일 전임자들의 위법에 따라 실시된 화순군수 보궐선거와 신안군수 재선거로 각각 4억 1천186만원과 6억 9천540만 원 등 모두 11억여원의 지방비가 사용돼 가뜰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주름살을 깊게 만들었다.

강종만 영광군수와 박희현 해남군수는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고길호 전 신안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었고, 전형준 전 화순군수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 사직했다.

단체장의 비리나 업무소홀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단체장의 비리나 업무소홀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단체장의 비리나 업무소홀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단체장의 비리나 업무소홀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단체장의 비리나 업무소홀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단체장의 비리나 업무소홀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단체장의 비리나 업무소홀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단체장의 비리나 업무소홀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민선 4기 전남지역 기초 단체장 재판현황

구분	혐의내용	1심	2심	비고
박희현 해남군수	• 뇌물수수			• 1심 심리중
김인규 장흥군수	• 배우자 교유금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배우자)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배우자)	※배우자 300만원 이상 벌금 확정될 경우 구속 직 상실
강종만 영광군수	• 뇌물수수	• 징역 10년 벌금 1억원구형		
유두석 장성군수	• 담적문제관련 • 상대후보비방	• 벌금 150만원	•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 이하로 확정될 경우 직위 유지
신정훈 나주시장	• 신지관리법, 건축법, 동지회 위반	• 벌금 1500만원		※벌금으로 확정될 경우 직위 유지
이정섭 담양군수	• 후보자 재산 허위신고 • 상대후보비방	• 벌금 80만원	• 벌금 80만원	※벌금 100만원 이하로 확정될 경우 직위 유지
정종태 보성군수	• 상대후보비방	• 벌금 300만원	• 무죄선고	※무죄 확정될 경우 직위 유지
오현섭 여수시장	•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확정 직위 유지
고길호 전 신안군수	• 금품, 음식물 제공			※벌금 200만원 확정 직위 상실
전형준 전 화순군수	• 금품, 음식물 제공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본인 사직

공직 혁신 둔감

대화 등으로 혼각을 다룬다. 특별한 사안에 대해 군정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지만 전문성은 떨어진다

는 평이다.
 그러나 지역혁신협의체(RIS) 구성에 따라 참여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도움이 군정에 일부 보탬이 되고 있다.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주민 의견을 중시하지만 시책을 최종 결정하고 집행하는 책임은 고스란히 단체장의 몫이다. 사실상 시장·군수 혼자 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선 시·군과 광주 지역 자치구는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떨어져 단체장의 부담은 그만큼 무겁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역 대학과 국제 및 지역 연구기관이 기초단체 시책까지 조언을 확대함으로써 자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 등으로 혼각을 다룬다. 특별한 사안에 대해 군정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지만 전문성은 떨어진다

는 평이다.
 그러나 지역혁신협의체(RIS) 구성에 따라 참여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도움이 군정에 일부 보탬이 되고 있다.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주민 의견을 중시하지만 시책을 최종 결정하고 집행하는 책임은 고스란히 단체장의 몫이다. 사실상 시장·군수 혼자 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선 시·군과 광주 지역 자치구는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떨어져 단체장의 부담은 그만큼 무겁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역 대학과 국제 및 지역 연구기관이 기초단체 시책까지 조언을 확대함으로써 자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서울시는 '무능공무원 3% 퇴출' 정책이 시민이 선정한 '서울시 10대뉴스'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를 비롯한 타지역 지자체의 무능공무원 퇴출 정책은 일부 방법상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그만큼 공직사회 안팎에서 큰 관심을 끌었음을 반영했다.

이에 비해 광주·전남 공직사회는 너무 '조용하다'는 평이다. 나주·고흥·곡성·여수·목포·진도 등에서 비슷한 제도 시행을 준비중이지만 결과는 미미하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능 공무원 퇴출이 곧 혁신이라고 보기 어렵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전남 공직사회가 느슨한 것은 사실이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대화 등으로 혼각을 다룬다. 특별한 사안에 대해 군정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지만 전문성은 떨어진다

는 평이다.
 그러나 지역혁신협의체(RIS) 구성에 따라 참여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도움이 군정에 일부 보탬이 되고 있다.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주민 의견을 중시하지만 시책을 최종 결정하고 집행하는 책임은 고스란히 단체장의 몫이다. 사실상 시장·군수 혼자 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선 시·군과 광주 지역 자치구는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떨어져 단체장의 부담은 그만큼 무겁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역 대학과 국제 및 지역 연구기관이 기초단체 시책까지 조언을 확대함으로써 자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 등으로 혼각을 다룬다. 특별한 사안에 대해 군정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지만 전문성은 떨어진다

소외계층 6만4000명 정원의외 대학 간다

2009 大入부터 기회균등할당제 시행
 노대통령 "2008大入 국민합의 지켜야"

가난해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을 갈수 있는 기회균등 할당제가 2009년부터 도입돼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 등 6만4천여명이 혜택을 볼수 있게 된다.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는 26일 '기회균등 할당제'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 방안'을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대학총장 초청토론회를 통해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대입 특별전형은 현재 정원의 3.9% 수준에서 2009년 11%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자녀들이 정원의 특별전형 대상으로 더 많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기회균등할당제로 입학한 학생은 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2만6천500명)의 경우 입학후 2년간 전액 장학금을, 3학년부터는 일정 성적 이상(평균 B 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전액 장학금

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서울에 가지 않고 지방에서도 최고 수준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세계 200위권대 연구중심 대학 10곳(수도권 5곳·지방 5곳)을 집중 육성하고 산업인력 양성 우수대학 100곳을 키우기로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은 내신 강화 논란에 대해 "2008학년도 대입 제도는 2004년에 정부, 학교, 학부모 등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은 그 기본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목별 1, 2등급에 만점을 부여키로 한 입시안을 2008학

년도에 유지하겠다는 서울대 방침에 대해 "서울대의 자존심 때문에 2008 학년도에는 그대로 가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정부도 어쩔 도리없이 상응하는 조치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태홍기자 hwangtae@

우암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중학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 (062)970-001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sc.ac.kr
 ▶ 상담전화 1588-5051 ▶ T. (061) 360-5000

매일, 속눈썹
 퍼머한 듯

라네즈 하이뎀 컬링 마스크라
 Curling for Asian Eyelashes.
 혁신적인 디스크형 라베르리가 놀라운 밀착력으로
 권말한 후, 파시플리마가 속눈썹 퍼머한 듯 파워 세팅,
 물레기로 연출해주는 마스크라. 아시아 여자들의 팔고
 쉽게 처지는 속눈썹 고민으로부터 탄생.

make up stand

LANEIGE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www.laneige.co.kr